

데스크 시각



박진현
문화·예향국장

“광주에서 개최됐으면 수십 만 명이 다녀갔을 텐데…” 지난 2022년 10월 5일 전남도립미술관에서 개막한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은 국내 미술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힘든 블록버스터전인 데다 개관 2주년 밖에 안된 신생미술관의 뛰어난 기획력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불편한 교통편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열린 루오전은 전국에서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쾌거를 거뒀다. 이를 두고 당시 미술계에선 루오전 관람객 5만 명은 서울과 광주의 20만~30만여 명을 뛰어넘는 대기특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도 그럴것이 옛 광양역사에 자리한 전남도립미술관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수와 순천에서 관람하고 싶어도 미술관 앞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너지 못 살린 두 비엔날레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광주에서의 접근성은 더 열악했다. 거장의 명화를 ‘직관’하기 위해선 고속버스나 자도차를 이용해야 하는 탓에 일부 관람객들은 ‘원정 나들이’를 포기해야 했다. 게다가 광주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비시즌 기간이다 보니 미술 애호가들을 광양으로 불러들이는 특수 조치 기대할 수 없었다. 지난해 8월 열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도 별반 다르

은펜칼럼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지역 정치권이 화답하여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시도 통합이 현실화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광주전남 정치권의 준비 부족과 변덕스러움, 정치력 부족이 격정되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를 잘 살려 6월 지자체 선거를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도 행정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정부는)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도 행정통합의 계기를 만들었다면, 좋은 각론을 만들고 통합을 성사시키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준비가 덜 된 정치권이 군사작전 하듯 통합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어 걱정이 크다. 가장 우려할 부분은 1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광주시의 분할, 해체 가능성이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업무 범위 및 권한에는 차이가 있다. 광주시에는 5개 구가 있지만 광주시는 하나처럼 움직였으며, 광주시장은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 반면 전라남도도는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권한 배분을 통해 때로는 하나가 되고 때로는 따로 움직였다. 향후 광주·전남이 통합할 경우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의 위상과 역할은 광주시장이 아니라 전남지사의 성격에

기고



김효중
사랑 실은 노래봉사단 단장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이 들려주는 흥겨운 노래가 나오면 어르신들은 즐거워하신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어깨를 들썩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연을 즐기신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그럴 때마다 필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은 힘들어도 이런 무대를 마련한 게 참 ভাল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연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만 매년 새해가 되면 또 한번 마음을 다지며 공연 계획을 세운다. 봉사단 단원 등 주변에 항상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큰 힘이 된다. 1993년 결성된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은 각 방송국 가요제 및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공무원, 회사원, 주부 등이 모여 만든 단체다. 재활원, 갱생원, 양로원 등 북

너희가 문화를 아느냐

지 않았다.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목포, 진도, 해남 일대에서 분산 개최된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44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지만 전시 기간 동안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들을 끌어들이는 마케팅을 발휘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기획한 ‘2024 허백림미술상’ 수상작가전-시정유묵(市精幽墨), ‘지금-여기’는 수목비엔날레 관람객을 미술관과 광주의 관광명소로 연계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지 못해 상생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지역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수백 만 명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없이 밀어부치는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지방 소멸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양 사·도의 행정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발표하면서 가장 ‘전남광주특별시’ (광주특별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실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된다.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구 320만 명의 호남권 메가시티 탄생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산호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아시아문화하브를 꿈꾸는 광주와 예향의 본류인 전남이 유기투합하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상승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 통합’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K-컬처 시대’를 선도하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해 광주특별시에 국립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를 우선 배치하는 카드가 그 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관광 2035’ 정책에 따라 산하의 ‘서울

시·도 행정통합 후 광주시, 해체냐 확대냐

가까울 것이다. 통합단체장은 산업·에너지·AI·교통·국토균형발전 등 지역의 중요 프로젝트와 광역 정부 내 시·군·구 역할 조정, 정부 및 기업과의 교섭 등의 역할을 떠맡게 될 것이다. 대신 시·군·구의 행정은 군공항 수용 문제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냈던 무안군수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수행할 것이다.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광주전남특별시-5개 구라는 2단계 행정구조만 존재한다. 한마디로 광주시라는 행정단위가 사라진다. 140만 광주시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교통, 상하수도, 관광, 정부 및 기업과의 교섭 등에서 통합적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광주라는 행정단위와 광주시장이라는 자리를 공중분해 시켜 놓고 이게 가능했는가? 천 년 이상의 역사와 1980년 5·18 광주항쟁을 통해 세계적 위상을 가진 도시, 하나의 생활권인 도시를 갑자기 5개 단위로 인위적 분할을 하는 행위는 ‘광주와 전남은 같은 생활권이기에 때문에 합쳐야 한다’는 통합의 기본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존의 지방자치법과 2단계 자치행정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 시대의 유물이다. 향후 과제는 시도 행정통합 및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준)정부 수준으로 승격시켜 5급 3특 체제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럼 지방행정 체계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대목에서 지역균형 및 지방분권의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의 대도시 지방행정은 대부분 주(도)-시-구의 3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혹자는 광주시를 존속시키면 옥상옥의 모양새가 되고, 명칭이 중복되어 통합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나눔은 계속된다

지시실에 찾아가 노래로 봉사하는데 지금까지 모두 548번의 공연을 진행했다. 성금, 물품, 공연행사 지원 드응로 약 10억원의 후원했다. 공공기관 등의 지원 없이 자비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30년 넘게 행사를 진행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초기에는 어버이날, 추석, 설날, 연말 등 1년이면 4차례 씩 12곳에서 행사를 열었지만 정년퇴직을 한 후에는 아쉽게도 어버이날과 추석 두 차례만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 연초에 어버이날 공연에 포커스를 맞추고 추석 공연은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버이날 공연에서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자 추석 공연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 열심히 발표를 펼었고, 필자를 믿고 응원해주준 원자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면서 추석 공연도 진행할 수 있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하며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행사를 진행할 때면 꼭 후원자들을 초청하는데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이 보낸 작은 정성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뿌듯해

예술단’을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2026년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이전하기로 했지만 ‘공문화 부족’ 등을 내세운 서울예술단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역사적인 ‘행정통합’ 흥하려면

사실, 지난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ACC는 360만 명의 방문객(2025년 기준)을 기록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 예술의전당에 비해 전시·공연 가동률이 낮은 편이다. 7개의 복합전시관을 거느린 핵심 시설인 문화창조원의 경우 ACC 미래운동회, 로지 이케다전, 봄의 선언전, 애호가 편지전, 뉴욕의 거장들전 등 평균 6~7개의 전시(2025년 기준)만 열려 ‘공간’에 비해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예술극장 역시 ‘비어 있는 날’이 더 많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 애호가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ACC의 서울예술단 유치도 부족한 상설 공연을 채워넣기 위한 공여지책 가운데 하나다. 또한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역사관의 광주 이전을 추진중이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머지 않아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 광주·전남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걷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지 모른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내딛는 도전이 광주·전남의 르네상스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국립 문화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양 사·도의 발상 전환이 어우러져야 한다. 특히 문화를 주축으로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함은 물론이다. 분명, 원 플러스 원(1+1)의 가치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미국 뉴욕주-뉴욕시-5개 구라는 3단계 지방행정의 사례, 혹은 독일 브레멘주-브레멘시-5개 구라는 3단계 모델을 소개하고 싶다. 뉴욕시 규모가 크고 명칭이 중복된다고 해서 뉴욕시가 뉴욕주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다. 브레멘시가 브레멘주의 거의 전부이지만 비능률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게 지방분권의 진정한 모습이다. 광주 정치권은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이 광주시를 분해,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고 광주정신 역시 더 큰 승화를 이룰 것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그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이율배반적이다. 광주정신은 자급처럼 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남이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계승된다. 순천, 여수, 목포, 진도군 등 전남에 있는 각 지역도 모두 각각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시도 통합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특징을 존중하면서 통합, 상생, 협력하는 것이지 결코 어느 특정 지역의 확대나 흡수가 아니다. 확대, 흡수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다. 남은 시간이라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 통합법 초안의 실상과 허상을 구분해 내자.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지방자치법도 개정하자. 광주 문제를 광주전남특별도-광주시-5개 구의 3단계 자치 형태를 취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자. 그것이 1000년 역사 광주와 광주정신 그리고 동일생활권은 동일 행정체계라는 상식적 원리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통합 후 발생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광주전남이 좋은 모델을 창출해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에도 좋은 시사점을 던지자.

한다. 올해 귀일원 민들레집에서 열린 추석 공연에는 채나리, 최진별, 나혜진 등 가수들과 이카루스 안무단 등이 참여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고 2000만원 상당의 후원물 품도 전달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올해도 지역 경기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줄금 후원을 해주었던 건설업체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늘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적은 액수라도 손에 쥐여주며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후원자들이 많았다. 그런 분들의 작은 정성을 모으고 또 우리 단원들이 더 마음을 합쳐 무대를 꾸민다면 어려운 시월에 있는 어르신들의 밝은 얼굴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수 십년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의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다.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베푸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받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이다. 올해도 가족들이 사랑을 전하는 어버이날과 민족대명절인 추석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나눔은 계속된다.

社說

광주전남 통합 명칭 합의…갈등 불씨는 여전

지역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갈등 요소 중 하나인 명칭 문제를 해결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차례 만남 끝에 통합 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 낸 것인데 ‘월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합의안에는 광주전남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한다는 것과 통합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등 세 곳을 균형있게 운영하며 일단 주사무소(주청사)는 정하지 않은 것은 성과지만 주사무소를 통합 특별시장에게 맡기기로 한 것은 미봉책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완전히 닫혔다고 할 수 없다. 합의문 도출후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일부 국회의원이 통합 청사 병기 순서를 두고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 것은 주사무소 논란이 선거 과정에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방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치인 상당수가 통합 단체장 선거에 출

마할 예정인데 자신의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3개 사무소 가운데 하나를 주사무소로 하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명칭 문제를 매듭 짓고 행정통합이란 뜻을 올린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당장 오늘부터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간다. 특별법안이 발의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보안을 거치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2월 안으로 특별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넘어야 할 하들이 괴롭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와 전남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 통합 의회 구성이나 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놓고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보다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주민투표 대신 의견 청취를 선택한 만큼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광주도서관 붕괴…감리 등 총체적 부실 확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철골 구조물(트러스) 용접 불량과 콘크리트 타설 미숙으로 인한 균열 등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와 감리단과 광주시의 허술한 관리가 빚은 참사라는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촉박한 공기를 맞추려고 속도전을 벌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꾸준히 제기한 문제였는데 감리보고서에 ‘부진 공정 만회 대책’이란 이름으로 속도전을 발인 정황이 드러났다.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붕괴 지점 철골 구조물과 콘크리트 타설 공사 검사서에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감리단의 보고서가 조작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경찰 조사에서도 붕괴 지점의 구조를 용접 불량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감리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표기하고 있다. 감리단의 콘크리트 균열 관리대장을 보면 지하 1층과 지반층인 1층 바닥과 벽체에 최대 3.2m 길이의 균열이 20여개 발생했는데 두께가 0.2mm로 일정하다고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자료 조작을 의심하고 있다. 모든 참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고 원인 규명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동원 가능한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겹쳐히 받아들이고 사고 원인 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無等鼓

인공지능에게 광주전남 공동 빛가람혁신도시를 물으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조성했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한 혁신 성장 핵심 거점이다’고 답한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전국에 ‘혁신도시’를 지정했고 광주·전남은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광역지자체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나눠 이전해줬는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한 곳이 아니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최대 규모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나주

혁신도시 정신

을 강조했다고 한다. 전남지역 시·군에서도 혁신도시 유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우려됐지만 필요 이상의 출혈은 막을 수 있었다. 광주와 전남은 또 한 차례 ‘공동’이라는 이름 앞에 놓이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속에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통합 청사 주소제지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시도가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는 ‘광주의 소리’만 내고 전남은 ‘전남의 소리’만 높이기 때문에 벌여지는 일이다. 통합과 상생을 위해서는 상대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하는데 정치적 유불리가 극명한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만 거론되고 있다. 과거 성공한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 상생과 양보가 우선됐던 것처럼 ‘광주와 전남이 남이 아니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할 때이다. 박광대 전 시장을 지역민이 여전히 그리워하는 이유도 지역의 상생에 앞장 섰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에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227-9600 (FAX 222-0195)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220-0551 (FAX 222-0195) 2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